

오늘의 주요기사

2023 4 14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14					1
강원도민일보				...	14			1
KBS 춘천							...	2
ms투데이			43	“	.	.	3	... 3
강원도민일보	04							4
江原日報	06							4
강원도민일보				“			”	... 5
강원도민일보							8	6
강원도민일보	04							7
강원도민일보	20							7
江原日報	19				300			7
江原日報		[]			()			8
江原日報	27	[]			()			8
강원도민일보	13	[]						8
강원도민일보	13	[]						8
강원도민일보	13	[]						8
강원도민일보	13	[]						8
江原日報	27							9
강원도민일보	01			'가				10
강원도민일보	02			11
강원도민일보	02			.	SK			12
강원도민일보	02				3000			12
강원도민일보	03						5200	13
강원도민일보	03				30	...	18	13
강원도민일보	03							14
강원도민일보	03							14
강원도민일보	13							15

강원도민일보	13	"	"	15	
강원도민일보	13			16	
江原日報	27	道-		16	
강원도민일보	11	가	'	17	
강원도민일보	12		FC	18	
강원도민일보	14	'	'	18	
The JoongAng	01			19	
강원도민일보	19	[]	'	20	
강원도민일보	19	[]		21	
江原日報	25	[]	,	22	
江原日報	25	[]	,	가	23

2023 04 13 ()

江原日報

강원도의회 14일 청소년도의회 개최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14일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한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도의원 49명, 청소년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청소년 사무처장.의사관 각 1명으로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도의회는 개회식 후 의장 선출, 안건상정.의결,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지방의회 활동을 체험한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교내 스마트폰 수거 조례안과 강원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체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2016년부터 청소년 도의회를 운영해왔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후 올해 다시 재개했다. 올 하반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의회가 열린다.

2023 04 13 ()

강원도민일보

'학교폭력' 자유발언... 14일 청소년도의회 열린다

이설화

강원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조례를 의결하는 등 지방의회 체험에 나선다.

강원도의회는 사전 선발한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14일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역구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 의회 사무처장, 의사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장 선거, 청소년 도지사와 청소년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뤄진다. 또, 청소년도의회는 '교내 스마트폰 수거 조례'와 '강원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도의원 6명의 5분 자유발언도 접수됐다. 스마트폰 부작용, 학교폭력,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문제 등의 내용이다. 본회의 의사진행까지 청소년 사무처장과 의사관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의장은 “청소년도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의회 체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는 2016년부터 청소년도의회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했었다.

lofi@kado.net

2023 04 13 ()



한우값은 폭락, 경영비는 폭등...위기의 한우 산업



[앵커]

한우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영비 부담은 급증하는데, 숫값은 말 그대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아지부터 어미 소까지 150여 마리.
오늘도 콩고루 먹이를 나눠 줍니다.
["맛있는 풀이야! 많이 먹어라!"]
하지만, 요즘은 영 기운이 안 납니다.
숫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박영철/강원도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이걸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 우리 먹고사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좀 압담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마리에 270만 원씩 하던 송아지값은 지금은 2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같은 기간, 거세우 값은 1킬로그램에 22,000원에서 1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20% 하락한 겁니다.
대신 경영비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냉난방비부터 인건비, 자켓값까지 다 올랐습니다.
벗짚을 말아놓은 겁니다.
조사료라고 부르는 소의 먹이인데요.
이 값이 최근 1년 사이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배합사료인데요.
이 값도 역시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사육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2배로 늘었는데, 한우 소비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입산의 공세 탓이 큼니다.
[정주교/강원도 축산경영팀장 : "수요공급의 곡선을 보면 2024년 말까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25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생존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 : "조사료 비용, 그리고 축산자재들을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자 가격 하향 조정과 소비 활성화, 사육 규모 조절 같은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송승룡

국민의힘 강원도의원 43명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생존 문제”

진광찬 기자

국힘 전원,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13일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결의문 통과 시 대통령실 이송 예정
“연금 개혁 시급, 2055년 기금 바닥”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김용래(강릉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개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사업으로 꼽은 국정과제다.

특히 결의문이 최종 통과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감사원, 국무조정실, 각 정부 부처 등에 이송해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3대 개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등 4대 원칙 전제를 강조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불법·무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추진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빠른 실현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문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학인=윤수용 데스크]

2023 04 14 ()
04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기행위 '강릉 2청사 직원 주거지원' 예산 삭감

행정국 소관 총 21억4000만원
조직개편안 미확정에 편성 우려
도 "예산확보 우선 필요" 통과 요청
오늘 기초실 추경안 심의서 모색



임미선 김길수 최승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강릉 2청사 직원 관사임차료 등 행정국 소관 2청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의 도의회 심의가 없었다는 게 삭감 이유로, 도는 14일 예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강릉 2청사(글로벌지역본부) 관련 예산 총 21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직원 관사관리 및 운영비 15억5000만원,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비 5억5000만원, 직원 거주지 이전

지원비 32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00만원 등이다.

위원들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어쨌든 2청사 7월 1일 개청은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 하는 것은 알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시원하게 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영월) 의원도 "정상적인 순서로 보면, 2청사에 대한 조직개편이 되고, (예산이) 그 후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미리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엔 편성이 안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반면, 최승순(강릉)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여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예산 가결에 힘을 실었다.

정일섭 도 행정국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예산이 확보돼야 직원 숙소에 대해 확정을 할 수 있다"며 "4월 안에는 확정을 해줘야 한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물량을 내준다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한창수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의결하며 "글로벌 지역본부 관련 예산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맞춰 추후 예산을 편성,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기초실 소관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행위는 이날 월주학생동 소재 반도체 교육센터 건축비 157억원을 의결했다. 이설화

2023 04 14 ()
06

江原日報

'절차 논란' 도청 2청사 준비예산 삭감

도의회 기행위 문턱 못 넘어
의원들 "추후 예산편성 심사"

속보=조례 개정보다 앞선 예산 편성으로 행정 절차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청 제2청사 출범 준비 예산(본보 지난 6·13일자 2·5면 보도)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국 추경 예산안에는 도청 제2청사 출범을 위해 관

사관리 및 운영 15억5,575만원,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5억5,260만원, 업무 추진비 3,260만원 등이 담겼다.

한창수 위원장(횡성)은 "제2청사 관련 예산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추후 예산을 편성,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무공간 조성비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절차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임미선 도의원(비례)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 도의원(영월)은 "7월 1일로 출발점을 맞춰 놓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일섭 도 행정국장은 "당초 조직 개편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행정안전부, 도의회와 협의가 늦어지고 예산안은 4월로 당겨지다 보니 기일을 맞추 수 없었다"며 "5월 원포인트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늦춰지면 관사 마련, 버스 임차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추진근거 선행돼야” 강원도의의회 검토보고서 지적

이설화



▲ 양구군 하리에 남아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재직시 공관. [양구군 홈페이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예산(본지 4월 10일자 3면)과 관련해 강원도의의회가 ‘명확한 추진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강원도는 “비공개” 입장을 밝힌 가운데 14일 도의회 심의가 이뤄진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의의회는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강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두고, “명확한 추진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편성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이 사업의 추진 근거로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지원 조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는 지난 316회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접경지역발전 종합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는 강원도 예산과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도 예산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보조금관리위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편성된 것”이라며 “‘적정’ 판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유가 달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정희 공관 보수 지원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제5병사단장 재직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을 보수해 접경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이다. 강원도와 양구군이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4일 318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관련 예산을 심의한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04 13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운영비 8억원 첫 지원

이설화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3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비 8억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3일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화재연구소는 도내 문화유산 발굴, 연구, 보존, 전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로 적자가 발생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도에서 유형문화재에만 집중했는데, 무형문화재도 많다”며 “유형,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강원학, 시사편찬 등 사업들을 검토해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 강원도 문화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최종모 문화재연구소장은 “인건비가 부족해 직원들이 발굴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등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출연금이 진행되면 예맥역사문화권이라든지 강원도 문화유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유산의 공적인 중요성에 대해 알리겠다”고 했다.

동의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04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13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심오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20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지시찰

도의회 농림수산위 스마트농업 단지 방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13일 평창에 위치한 스마트농업단지와 열원공급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부지에 방문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江原日報

2023 04 14 ()
19



반암항 어촌뉴딜 300 준공식 반암항어촌뉴딜 300 준공식이 13일 거진읍 반암항 일원에서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4 13 ()

江原日報

[동정]원제용 강원도의원(원주)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4일 오전 6시30분 원주천 둔치에서 열리는 2023년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장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4 14 ()
27

◇원제용강원도의원(원주)



은 14일 오전 6시30분 원주천 둔치에서 열리는 2023년 원주시 농업인새벽

시장 개장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13



심오섭 도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강릉주 문진복지

회관에서 열리는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13



최승순 도의원은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기획행정

위원실에서 열리는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심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13



박호균 도의원은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농림수산

위원실에서 열리는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13



김용래 도의원은 14일 오후 1시 20분 도의회에서

열리는 청소년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4 14 ()
27



◇강원도학생스포츠센터 현판식이 13일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열렸다.

평창서 강원도학생스포츠센터 현판식

강원도학생스포츠센터 현판식이 13일 평창 대관령면에서 열렸다.

2001년 폐교한 도암중 자리에서 강원학생훈련장으로 문을 열었던 센터는 그동안 동계종목 위주의 훈련 지원이 이뤄졌다. 올 3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강원도학생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계종목 훈련도 지원하게 됐다.

현판식에서는 김순렬 평창군

새마을협의회회장이 스키 유망주 3명에게 각 50만원씩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기복 강원학생스포츠센터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강원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마음껏 갈고닦아 체육인으로, 예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평창=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 취소 말고 '강릉 여행' 적극 호소

지금 '가자 동해안으로'



강릉 대형산불

경포 등 해안가·관광지 한적
'민폐 싫다' 심리로 여행 꺼려
호텔 등 취소 숙박률 30% 하회
관광객 방문, 경기회복 큰 도움
강릉시·강원도 관광 홍보 집중

“강릉 관광이 곧 자원봉사이며 예약
했던 강릉여행을 취소하는 것이 곧 2
차 피해입니다. 강릉으로 꼭 여행 와
주세요.”

초광풍을 동반한 산불로 울창한 송
림과 해안가 관광지를 잃은 강릉시는
하루아침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여행락철 경기침체의 충격을 겪고 있
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경포일대
는 붐볐으로 물들어 수십만명의 관광
객이 강릉을 찾았으나 지난 11일 발
생한 난곡동 산불로 지역의 펜션단지
와 호텔, 상가를 비롯해 경포 등 해안
가 일대에는 관광객들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관
광객들의 특성상 '민폐를 끼치지 싫
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해 관광을 꺼
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불피해가 없는 업소들조차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없어 극심한 피
해를 입고 있다.

강릉지역 상인들은 산불피해로 인
한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관광객
들의 '강릉 방문'을 적극 호소하고 있
다. 실제 경포와 강릉, 안목일대 호텔
은 예약 손님들이 줄줄이 취소해 숙박



강릉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13일 손
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며 경포해수욕장 앞 횡집거리가 한산하다.

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펜션들도 이번 주말
(14~15일) 숙박예약들이 대부분 취
소됐다.

현재 다음주 예약 취소문의도 잇따
라 접수되고 있어 KTX 강릉선 개통 이
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던 '강릉의 관
광'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와 강원도 등은 초대형
산불로 '국민 휴식처'를 잃은 강릉지
역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
도록 전국민 강릉 방문 아이디어를 짜
는 등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강릉

방문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재난지역 관광활성
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도
'가자 동해안으로' 특별캠페인을 추진
하는 등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홍보에도 여행객들
이 얼마나 방문할지 미지수여서 상인
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
은 "산불피해지를 방문하는 것이 오
히려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일"
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객 방
문을 독려하는 캠페인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종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

지부장은 "관광 중심지인 경포동 일
대 펜션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숙박 예약이 취소되고 있
다"며 "지역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향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시점
이다"고 강조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산불로 인해
지역 숙박업 및 관광업이 예기치 않은
타격을 받았다"며 "피해지 복구에 만
전을 기하면서도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해 시작했
다"고 밝혔다.

홍성배·이연재

▶ 관련기사 2·3·13면

2023 04 14 ()
02

강원도민일보

이재민 이주·성금운동·관광 캠페인... 전방위 대응책 마련



강릉 대형산불

도·강릉시, 수습대책 회의 개최
피해규모 조사 가용인력 총동원
김 지사 "도차원 전폭 복구 지원"
이웃 지자체 위로 손길도 잇따라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산불 발생으로 잿더미가 된 강릉 경포 피해지역에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과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관광 재개를 통한 경기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관광 특별 캠페인도 전개될

전망이다. 경포산불 피해 3일째를 맞은 13일 강원도와 강릉시는 '산불피해 수습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형 산불 피해 후속 대응을 전방위로 펼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응방점을 짚고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산불이 순간 최대풍속 3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발화지점에서 1시간 30분만에 8.8km에 이르는 바닷가까지 쓸어버려 피해가 확산됐다"며 "빠른 피해복구만이 이재민들의 일상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가용인력을 총 동원, 피해조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외에 피해주민들이 실질적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금모금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154세대 327명의 주거 안정을 위해 15일까지만 아래나에 거주토록하고 이후에는 LH등에 협조를 구해 임대 아파트, 호텔, 이동식 주택 등으로 이주토록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도 3일째 강릉현지에

서 수습대책회의를 열고 도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지사는 강릉시의 1차 피해조사에 이어 오는 21~24일까지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2차 피해 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 하루 속히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국 3000여개의 기관·기업 등에 성금지원 요청서를 보내고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자! 동해안으로'라는 특별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원강수 원주시장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를 방문,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위로를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육 시장은 직원봉사단 40명을 이재민 생활지원 등에 투입토록 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원 시장도 컵라면 500박스를 전달하는 이웃 지자체의 아픔을 함께 했다.

또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서울 서초구는 이재민들의 임시 대피소인 강릉 아래나를 방문, 라면과 즉석밥 등 구호



13일 강릉산불대책상황실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이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품을 전달했다. 부천시도 공직자 자율 모금과 노조기부 등 성금 1340만원을 마련, 강릉시에 기탁했다.

김홍규 시장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신청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돼야 절거 등 복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시설

복구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손길을 보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의 산불피해 규모는 13일 현재 인명피해 사망 1명과 화상 2명 등 18명이며 이재민 154세대 327명이 아래나에서 대피중이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02

현대·SK 등 대기업 피해복구 지원 행렬

무료 차량 점검·가전수리 제공
구호물품·이재민 성금 기부도

현대차와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강릉 산불 피해지를 위해 수십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목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3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피해복구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 또 산불피해지에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4대와 통합 방역구호차량 1대를 투입해 신속한 방역대응을 돕고, 심신회복버스 1대를 투입해 피해주민들과 재난현장 근무자들의 휴식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과 화재피해 차량은 수리비용을 최대 50%할인, 무상세차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L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릉산불 피해성금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LG전자는 긴급대피소에 세탁기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 수리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무료 충전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LTE 라우터를 설치했으며,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해 3억원 규모의 생수와 칫솔, 샴푸 등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SK그룹도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성금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피소에 IPTV와 와이파이 라우터, 휴대전화 충전 부스를 설치하고, 핫팩과 담요 등의 구호물품을 전

달했다. 또 이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3억원은 사랑의열매의 긴급지원이고, 나머지 12억원은 KB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T&G 등에서 3억원씩 기부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생수와 음료, 컵라면 등의 식품 1000인분이 담긴 긴급구호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강릉을 포함해 이번 달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경북, 전남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도 같은 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구호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향후 강릉아산병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 및 검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연재·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02

강릉 출신 심석희 3000만원 기부

‘강릉의 딸’ 심석희(26·서울시청·사진)가 고향인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 성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3일 “심석희가 최근 성금을 전해왔다”며 “해당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석희는 협회를 통해 “강릉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산불이 나머지가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18일부터 시작하는 2023-2024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심예섭

2023 04 14 ()
03

강원도민일보

‘재로 변한 주택’ 정부 보상금 최대 5200만원 턱없이 부족



강릉 대형산불

주택피해잠정 154곳, 전파 116곳
도소방본부 오늘까지 정밀조사
이재민 적절한 피해보상 미지수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포호수 일원에 조성된 산책로 데크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김정호

주택과 펜션 등을 갯더미로 만든 강릉 산불이 8시간만에 진화, 강릉시가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허가 건물의 보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현재까지 154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116곳이 전파됐고 19곳이 반파, 20곳은 부분 파손으로 분류됐다. 지난 11일 밤thin 주택 피해 규모가 19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새 8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숙박시설의 피해도 컸다. 경포호 일대 숙박시설 71곳이 전소됐고 15곳이 부분 파손된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강원도는 추가 조사 후 오는 21일까지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계획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2도 화상 2명·손가락 골절 1명), 단순연기 흡입 14명 등 18명이다.

농작물의 경우 4.35ha가 망가졌고 비닐하우스 14동과 저온저장고 6동, 창고·축사각 3동, 농막 13동도 파손됐

다. 농기계 20대도 피해를 입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4일까지 소실 정도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강릉시의 경우 17일까지 경포동주민센터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당국이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보상금 수준이다.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 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해당 금액으로 새로 짓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산불로 생업을 잃은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더욱이 피해가 집중된 펜션의 경우 불법건축물로 구분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보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유자가 누군지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펜션은 적법하지만 예전에 지은 건물 중 일부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으로만 따지면 이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 심의회를 개최, 이재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임시주택 희망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고 파종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농업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훈 ericjh@kado.net

2023 04 14 ()
03

강원도민일보

도내 학생 산불피해 접수 30명... 주택 전소 18건

지난 11일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내 학생은 30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3일 기준 총 30건의 산불 관련 학생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주택 전소로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18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가게 등과 같은 사업장이 화마를 입은 경우도 4건으로 파악됐다. 이외 기타 피해도 8건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 피해 학생 상황을 분석, 지원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03

불 탄 내 집보다 이웃 먼저 '재난 속 영웅'

경포동통장협 전인집 회장 눈길

“일면식도 없는 분이 우리집과 가족은 물론 이웃들을 살리셨어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열 일 제쳐두고 이웃들의 집에 산불로 인해 불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마속에서 사투를 벌인 시민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포동통장협의회 전인집 회장. 전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쯤 경포동 본인의 자택에서 약 3분 떨어진 저동 펜션촌에 산불이 옮겨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하던 일도 멈추고 바로 해당 장소로 이동했다.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믿을 수가 없었다. 펜션과 주택의 코앞까지 불길의 치솟고 있었다.

그는 본적도 없는 이웃의 집 문을 두드리고 당장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곧장 가정용 호스로 물을 뿌렸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이견모(70)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바람이 많이 불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벨을 누르고 대피하라 소리쳤다”며 “본인 집인 것처럼 내 집에 같이 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전씨는 곧장 옆



전인집(사진 왼쪽) 경포동통장협의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집으로 뛰어가 또 물을 뿌렸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유독가스를 마시고 불을 끈 그는 결국 현장에 봉사를 나온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운영하는 펜션은 잿더미가 돼 버렸다. 불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간 사업장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전회장은 “내 집이 탄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웃의 집에 불에 타버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숨진 전모씨는 같은 집안의 가까운 사이였다. 전씨는 “같은 집안분이 이번 산불로 돌아가시는 일도 생기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03

김 지사, 유민봉 시도지사협 총장에 피해복구 협조 요청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사무총장이 13일 강릉을 방문,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나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유 총장은 이날 강릉 녹색 도시체험센터에 마련된 산불피해 종합상황실에서 만난 가운데 김 지사는 유

총장에게 조속한 산불피해복구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시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주택 100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커 복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협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을 요청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 결의문 채택에 사무처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강원도의 조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바란다”며 “김 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현안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형 ▶ 관련사진 20면

강원도민일보

피해 이재민 빠른 일상복귀 한 마음 한 뜻



강릉 대형산불

시민단체협 지원 대책 등 논의
 세제 지원 등 현실적 대안 제안
 김 시장 “청금모금 앞장서 달라”
 김 지사 “도 차원 피해복구 노력”



강릉시가 13일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강릉 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김홍규 시장, 최종봉 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20개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해 피해복구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성금 모금활동, 이재민 세금 감면 및 면제, 재난지역 상인 손실 보상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강릉시가 13일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강릉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나왔다.

이선종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장과 박주국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펜션들 대부분 대출을 안고 있다 보니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과 공과금 면제 및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필요

하다”며 “현실적으로 산불피해지역 내 외식 및 숙박업소들의 손실 보상금 지원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최종봉 강릉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산불피해지라 관광객들의 방문이 감소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적

극방문을 홍보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겠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빠른 시간 내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규 시장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시민단체의 지원이 절실하고, 지금 강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우리가 만원씩만 걷어도 이재민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 모금운동에 앞장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재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거문제로 현재 LH와 협의해 주택과 레지던스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후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면 원래 있던 주거지에 이동형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등 강원도 차원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남 일 같지 않아서” 두 팔 걷어붙인 이웃들

지역 곳곳 온정의 손길

음식점·카페 등 무료·할인 제공
 대피소 어린이에 아동물품 후원

“우리 동네, 우리 이웃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죠.” 강릉시민들이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온정 나눔에 나서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이재민 돕기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강릉 포남동의 한 미용업소는 지난

12일부터 이재민들과 재난복구를 위해 힘써주는 이들을 위해 무료샴푸 서비스와 클렌징폼 및 기초제품, 면도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유천동과 교동에 위치한 반려견 관련 업소들은 강아지 등 반려동물물품을 동반한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장소와 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빵집과 카페, 음식점 등 다수 상인들이 이재민과 소방관 등을 위해 식음료를 무료 제공하거나, 할인해 주고 있다.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옷 등 아이들 물품이 부족하다는 글이 게재되자 지역 아동복 매장과 주민들은 너도나도 경포동주민센터와 대피소로 아동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주민 한 모(39) 씨는 “아이들이 대피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며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이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현재 이재민 대피소인 아이스아레나에는 10여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역 내 SNS에는 이재민 돕기에 나서겠다는 시민들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13

한은 산불피해 중기 대출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강원도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중 1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4·11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능하다. 황유민

2023 04 14 ()
27

江原日報

道-강원대 손잡고 동아시아 연어시장 개척 나선다

강원도가 강원대와 손잡고 연어시장의 블루오션인 동아시아지역 공략에 나선다.

강원도와 강원대는 13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산업화 및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하고, 어린 연어의 내수면 스마트양식 산업화, 스마트 양식 기술 연구개발, 연어 사료 개발 등 치어 육성부터 회귀, 산란까지 전 과정을 강원도 내 기술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아직까지 북미와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연어시장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포부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내 최초로 연어를 자체 육성(본보 2022년 9월26일자 1면 보도)하고 부화 1년3개월만에 바다 방류에 성공하는 등 'K-연어' 산업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산업화·공동연구 협약



◀강원도와 강원대는 13일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산업화 및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기했다.

화의 성공사례를 기록해 왔다. 앞으로 지역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 지자체가 단독으로 갖추기 어려운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형성한 뒤 한층 더 체계적인 산업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어 대량 양식을 위해서는 연어의 생태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사료 개발, 부산물 처리, 상품화 과정 등 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원대는 이미 각 분야별 특화 연구팀을 구성, 초음파를 이용한 대서양연어

내 바이오 물질 추출방법 특허를 진행하는 등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24년에는 수산생명환경융합학과를 신설해 연어산업에 이끔 차세대 인력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강원형 K-연어 산업화 중장기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양식, 가공, 유통, 부산물 등 전방산업과 사료, 기자재, 백신 등 후방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웅 강원대 LINC3.0사업장은 "강원도 수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일으켜 미래 고부가가치 융합바이오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균 도 환경해변부장은 "전 세계 60조원의 연어시장을 선점하고, K-연어를 강원도 킬러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가까워진 ‘정원도시’ 관련예산 상임위 통과

시의회 복지위 계수조정 회의
 용역·소재실용화센터 48억원
 동시추진 여부 등 의견 분분

춘천시가 ‘정원도시 춘천’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에 상정한 48억 5000만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임위 통과에 이어 관련 절차가 잇따라 시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원도시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13일 정원도시 춘천 조성 사업 등 소관 부서 사업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정원도시 조성 사업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 46억 5000만원 등 48억 5000만원이다.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춘천 상중도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정원소재 연구동, 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앞서 지난해 9월 강원도·춘천시·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원들 간의 의견은 분분했다. 유환규 시의원은 “상중도에 80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유적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역사유적이 얼마나 있

는지, 도시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정원조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무리하게 도시정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설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갑 시의원도 “육성계획용역과 실용화센터 기반조성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보단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종목표인 국가정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선영 시의원은 “최근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는 하루 관광객이 60만명까지 유입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까지 진

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한 번에 추진해야 한다”며 “상중도에 유물이 있다면 유물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국가정원 그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기반조성시 문화재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환경위 계수조정 회의 결과 집행부가 상정한 오페라 페스티벌 1억 4000만원, 커피콘텐츠 육성 4억원,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1억 2600여만원, 환경공원 주민감시요원 보상 3200여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조각 공공미술 심포지엄 5억원은 3억원이 삭감, 2억원이 반영됐다. 이승은

2023 04 14 ()
12

강원도민일보

강원FC 전용구장 대비 종합운동장 용도 변경

원주시, 연내 변경 완료 예정
경기장 건립 재개 항시 염두
건폐율 상향 체육시설 확충

강원FC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백지화에도 원주 지역사회의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종합운동장 일대(명륜동 342번지)를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985년 조성된 종합운동장은 27만㎡ 규모로 실내체육관, 댄스공연장, 치악예술관, 국민체육센터, 공연장 등 체육 및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췄다. 하지만 건폐율 20%, 용적률 33%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 한계상 더 이상의 시설물 확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부지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부지 활용 폭

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향후 강원FC 유치를 위한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강원FC 전용경기장 원주 유치 추진위원회도 강원FC 경기 현장 응원, 지역내 원주 유치 당위성 홍보 및 시민 유치 의지 결집 등 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연행 추진위 사무국장은 “건립 계획은 중단됐지만 축구 전용구장 건립 필요성, 원주 유치 당위성이 사라

지진 않았다”며 “건립 재개에 대비해 유치 활동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연내 용도 변경을 완료해 언제라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 가능토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FC 활성화를 위해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 지난 2022년 춘천과 원주, 강릉 유치전이 절정에 달했으나 같은해 9월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중단했다. 홍성우

2023 04 14 ()
14

강원도민일보

‘청년 거점공간’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착공

장성동 일원 연말 준공 목표
취·창업 지원 소통 역할 등
청년문화·정책 활성화 기대

청년들의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최근 장성동 210-32번

지 일원에 지역 청년들의 공간거점 역할을 수행할 창업지원센터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준공은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는 창업지원센터는 건축면적 397.49㎡,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회의실 10실, 휴게데크 및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다.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청년관

련 인프라 부족(공간, 프로그램 등)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지역 청년 문화 형성 및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창업 지원, 청년공동체 및 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도 기대된다.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자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센터를 통해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구심점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2023 04 14 ()
01

The JoongAng

석탄발전소 문 닫는데 강원 동해안만 늘었다

탄소중립 정책 아이러니

탈석탄 기조에 보령 등 6기 폐쇄
서쪽에서 동쪽으로 '석탄 돌리기'
주민들 "청정 강원 이미지 훼손"

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해진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서울에서 온 관광객 한모(28)씨는 "BTS 성지라고 해서 들렀는데 모래도 심하게 깔여 있고 주변이 공사판이어서 관광지 느낌이 별로 안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해수욕장에는 관광객들이 BTS 사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명사십리로 불리던 해변 주변에 공사 현장이 곳곳에 보였다. 약 3km 떨어진 해변에선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석탄을 실은 배가 접안하기 위한 항만 공사였다. BTS 사인 왼쪽에 "석탄 화력 연기 뿜는 삼척! 눌러 안 갈래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이유였다.

최근 강원도에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3기가 신규 가동을 앞두고 있다. 강릉 안인화력 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다. 최근 준공한 강릉안인화력 1호기까지 더하면 총 4호기(4180MW 용량)가 강원도 동해안에 새로 들어서는 것이다. 풀가동 시 강원도 전체 인구(153만여 명)의 두 배가 넘는 367만여 명에게 1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 적지

않은 강원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석탄발전소로 인해 청정 도시 이미지가 깨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강릉시 안인면에서 30년 넘게 막국수 식당을 운영해 온 안영주(45)씨는 "요즘 서울에서 미세먼지를 피해서 강릉까지 온다는데, 여기는 발전소가 생기고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겨 폐업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탈석탄 기조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점이다. 정부는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다른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줄이는데, 강원도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강원도가 '석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2기(5740MW 규모)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동을 시작했거나 가동될 예정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7기(용량 7278MW)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기가 강원도 동해안에 있다. 이에 대해 전영환 흥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진정한 탈석탄 정책이 아닌 결국 석탄 돌리기를 하는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삼척=천권필 기자, 정상원 인턴기자
jeong.eunhye@joongang.co.kr

» 6면 '석탄'으로 계속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 19

산불 '전선 발화' 예방 대책 세워야

-강릉 화재 원인 단선 추정, 정부·한전 방안 모색을

강릉해안관광지 일대를 덮친 대형산불의 원인이 '전선 단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했던 몇몇 대형산불의 원인이 전선 단선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형사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일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시비를 떠나산불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벌과 추궁이 목적이 아니라,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유아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같은 유형의산불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이나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개인 실화가 아닐 것으로 추정돼, 상황 파악이 더욱 중요합니다. 산림청이 경찰과 함께 강릉 산불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현장에 끊어진 전선과 발화 지점이 일치했고,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엔 정전이 일어났다고 전해 전선 발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단선으로 인한 것은 맞지만 전

선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압선 등 전선으로 인한 산불은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 3월 속초시 청대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이 '고압선에서 발생한 불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경찰은 인위적인 과실로 인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ha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의 경우 그 원인이 전선 단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선에 의한 산불이 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알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내에는 5000여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탑을 지나고 고압선은 언제든 발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송전탑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주로 설치돼 화재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선으로 인한 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강릉 산불 원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소중한 산림 자산과 주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압선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4 ()
/ 19

선거제 개혁 사회적 합의로 진전하길

-국회 집중토론 종료, 비례성 대표성 지역성 반영 충실해야

선거제 개혁을 목적으로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 집중토론이 4월 13일 종료됨으로써 더 진전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네차례에 걸친 집중토론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성을 반영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활동과는 별도로 전국 각지 700개 가까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측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선 및 국민 여론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치개혁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국회 전원위 토론에서는 민의의 절반이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소멸의 길을 걷는 지역의 대표성이 강조됐습니다.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4인 이상 6인 이하를 뽑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대안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선거제가 같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이며, 지역주의 타파 방향성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영·호남을 묶는 동서 통합형 권역 설정 주장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는 후퇴한 적도 있긴 했으나 발전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국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가 아닌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선거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편차가 큰 문제해소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군소정당이 피해 보는 역효과를 볼렸습니다.

사회적 지탄이 컸기에 국회를 향한 국민 눈초리도 매섭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민의, 소수의견을 반영하자면 선거제도는 신생정당을 포함해 군소정당이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의석수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학계 지적도 있는 만큼 대안의 폭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과 밀접한 만큼 단지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간 합의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촉구한 것과 같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확대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여망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옮겨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4 14 ()

/ 25

도내 은행점포 감소, 금융복지 사각지대 대책 있나

강원도 내 금융점포가 사라지면서 은행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말 강원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금융점포는 485개로 전년 498개보다 13개나 줄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과 금융권의 경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이후 7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2021년 강원도 금융포용지수는 0.246으로 전국 평균 0.316보다 낮았고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9곳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은 복원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심 집중화로 IT 기술에 능숙지 못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춘천(25개), 원주(30개), 강릉(17개)에 도내 예금은행 절반 이상인 72개가 몰렸으며 10개 시·군은 5개 미만의 점포를 보유했다. 금융 업무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 등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금융 소외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모바일 뱅킹에서 제공하는 송금이나 환전, 예·

적금 이자 등에서 우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은행을 이용해 왔던 지역 주민들이 점포 폐쇄를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질 좋은 일자리의 상징인 은행권의 고용 흡수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점 축소가 은행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소외 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과 함께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은행 측은 비대면 금융 앱 이용 안내와 전산화기기를 유지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감하기 어렵다. 특히 은행점포망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등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금융 소외 현상을 막을 후속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점포를 폐쇄할 경우 은행권이 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는 금융권이 지역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江原日報

2023 04 14 ()
/ 25

대형 산불, 언제까지 소방관 사투에만 기댈 건가

지난 11일 강릉 산불로 산림 등 379ha가 타고 이재민 300여 세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 조사 결과 12일 오후 3시 현재 주택 59동, 펜션 33동, 숙박시설 3동 등 모두 100동의 재산 피해와 사망 1명, 경상 17명 등 총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언제까지 소방관 사투에만 기댈 수 없다. 이전 산불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12~2021년 10년

간 도내에서는 720건의 산불이 발생해 5,513ha의 산림이 사라졌다.

하지만 2022년 3월 발생한 산불로만 이보다 많은 6,567ha의 산

림 피해를 입었다.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3월 산불의 피해 복구 비용만 1,135억원에 달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 진화와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미리 예방 분야에 투자한다면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산림과 주민 생활권의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산불에 대비한 소화시설을 갖추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 전국 곳곳에서 산불 규모와 빈도는 과거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문제는 산림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릉 산불 직전인 올 4월2일과 3일 이틀 동안에만 전국에서 46건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대형 산불 22건으로 생긴 산림 소실 피해만 3만233ha에 달한다.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릉 산불에 전국의 소방력이 집중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강풍에 비산하는 불덩이들이 민가와 펜션 수십 채를 집어삼켰다. 강풍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조차 장시간 중지됐다. 천만다행으로 내린 비 덕분에 불길은 잡혔다. 한마디로 ‘천수답 산불 진화’였다. 이제는 산불을 기후 재해로 규정해 치밀한 대응 전략

의 대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최근 10년간(2013~2022) 산림 소실 3만233ha

임야 전기 송배전 설비, 산불 주요 원인 등장

‘수목정리지역’ 설정 등 관리 대책 수립을

임야 전기 송배전 설비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시설 주변의 수목 제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모든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놓고 분석,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예도 참고해야 한다. 산림 내 전기 설비로 인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등은 송배전 설비 주변을 수목정리지역(Vegetation clearance zone)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임야를 지나 는 대형 송전탑 주변에 자체 CCTV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반 송배전 설비의 경우 인접 산림을 제거하는 등의 강력한 관리 대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교한 산림 정책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